



의안번호	제 2010 - 1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8. 30. (제27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8
I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2
1. 개요	12
2. 관련 규정	12
3. 공개 방법	13
4. 추진 일정	13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결과 보고	14
1. 공청회 개요	14
2. 발표 내용	14
IV. 의결안건 상정 요청서 접수 보고	15
1. 개요	15
2. 관련 규정	15
3. 의결안건 상정 일정	15
V. 2009 연간보고서 발간 보고	16
1. 개요	16
2. 추진 경과	16

3. 제작 내역	16
4. 국회 보고	16
5. 기타 기관 배부	17
 VI. 전문위원 업무지원	 19
 VII. 전문위원 위촉	 20
1. 개요	20
2. 추진 내역	20
 VIII.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준비	 22
1. 필요성	22
2. 일시 · 장소	22
3. 참석대상	22
4. 주제	22
 IX.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준비	 23
1. 목적	23
2. 개요	23
 X.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요구	 24
1. 개요	24
2. 요구 내용	24
 XI.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30
1. 개요	30

2. 접수 의견	30
XII. 기타	31
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 제출	31
2. 내용	31

별첨 「의결안건 상정 요청서」
「전문위원(신규 위촉) 프로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

I.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0. 6. 30.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232	0	0	232
	살인미수	344	0	0	344
	존속살해	20	0	0	20
	존속살해미수	14	0	0	14
	전체	610	0	0	610
뇌물죄	뇌물공여	151	377	15	543
	뇌물수수	84	198	0	282
	부정처사후수뢰	9	6	0	15
	수뢰후부정처사	9	1	0	10
	제3자뇌물교부	13	15	1	29
	제3자뇌물취득	5	10	1	16
	특가범(뇌물)	63	0	0	63
	전체	334	607	17	958
성범죄	강간	79	1	0	80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97	0	0	97
	강간치사	1	0	0	1
	강간치상	267	0	0	267
	강도강간	8	0	0	8
	강제추행	29	251	264	544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상해	26	0	0	26
	강제추행치상	87	8	0	95
	미성년자의제강간	8	0	0	8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0	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23	4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1	0	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상해)	12	0	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	15	0	0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	0	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	14	0	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2	0	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14	0	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강간등)	1	0	0	1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96	4	5	305
	성폭법(강간등살인)	3	0	0	3
	성폭법(강간등상해)	78	0	0	78
	성폭법(강간등치상)	91	0	0	91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9	20	1	100
	성폭법(절도강간등)	13	0	0	13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67	0	0	16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1	0	0	3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5	1	0	4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8	1	0	9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0	0	5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법(특수강간)	214	0	0	214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47	0	0	47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6	0	0	16
	성폭법(특수준강간)	70	0	0	7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54	2	4	6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73	2	4	79
	준강간	69	0	0	69
	준강간치상	8	0	0	8
	준강제추행	13	71	40	124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55	5	28	288
	전체	2,328	389	350	3,067
강도죄	강도	76	0	0	76
	강도살인	8	0	0	8
	강도상해	426	1	0	427
	강도치사	1	0	0	1
	강도치상	27	0	0	27
	준강도	56	0	0	56
	준특수강도	8	0	0	8
	특가법(강도)	7	1	0	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0	0	2
	특수강도	287	7	0	294
	전체	898	9	0	907
횡령·배임죄	배임	11	459	82	552
	업무상배임	12	247	64	323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업무상횡령	38	1,540	476	2,054
	특경가법(배임)	159	5	0	164
	특경가법(횡령)	212	5	0	217
	횡령	21	1,408	607	2,036
	전체	453	3,664	1,229	5,346
위증죄	모해위증	0	11	0	11
	위증	22	1,137	271	1,430
	위증교사	5	129	7	141
	전체	27	1,277	278	1,582
무고죄	무고	20	1,281	435	1,736
	특가법(무고)	6	0	0	6
	전체	26	1,281	435	1,742

◆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110	0	0	110
	살인미수	134	1	0	135
	존속살해	11	0	0	11
	존속살해미수	2	0	0	2
	전체	257	1	0	258
뇌물죄	뇌물공여	96	70	2	168
	뇌물수수	44	62	0	106
	부정처사후수뢰	12	2	0	14
	수뢰후부정처사	17	1	0	18
	제3자뇌물교부	9	10	0	19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제3자뇌물취득	4	6	0	10
	특가법(뇌물)	51	1	0	52
	전체	233	152	2	387
성범죄	강간	110	0	0	110
	강간살인	2	0	0	2
	강간상해	70	0	0	70
	강간치사	1	0	0	1
	강간치상	102	0	0	102
	강도강간	19	0	0	19
	강제추행	25	150	103	278
	강제추행상해	9	0	0	9
	강제추행치상	41	1	0	42
	미성년자의제강간	4	0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1	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0	0	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상해)	5	0	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	4	0	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절도강간등)	1	0	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	6	0	0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4	0	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	0	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11	0	0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강간등)	5	0	0	5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12	0	0	112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법(강간등살인)	6	0	0	6
	성폭법(강간등상해)	56	1	0	57
	성폭법(강간등치상)	71	0	0	71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4	0	0	14
	성폭법(절도강간등)	14	0	0	14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15	0	0	11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48	0	0	48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4	1	0	3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0	0	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9	0	0	9
	성폭법(특수강간)	139	0	0	139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52	0	0	152
	성폭법(특수강제추행)	21	0	0	21
	성폭법(특수준강간)	34	0	0	3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2	0	0	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2	0	0	32
	준강간	20	0	0	20
	준강간치상	3	0	0	3
	준강제추행	2	18	1	21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01	1	4	106
	전체	1,441	173	108	1,722
강도죄	강도	104	8	0	112
	강도살인	31	0	0	31
	강도상해	407	4	0	411
	강도치사	3	0	0	3
	강도치상	30	0	0	30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준강도	42	1	0	43
	준특수강도	4	0	0	4
	특가법(강도)	7	0	0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9	0	0	9
	특강법(특수강도)	2	0	0	2
	특수강도	354	5	0	359
	전체	993	18	0	1,011
횡령·배임죄	배임	10	97	4	111
	업무상배임	32	200	14	246
	업무상횡령	68	669	96	833
	특경가법(배임)	120	4	0	124
	특경가법(횡령)	201	3	0	204
	횡령	25	541	110	676
	전체	456	1,514	224	2,194
위증죄	모해위증	0	9	0	9
	위증	8	92	3	103
	위증교사	2	14	0	16
	전체	10	115	3	128
무고죄	무고	20	303	64	387
	특가법(무고)	5	0	0	5
	전체	25	303	64	392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서 2010. 6. 30.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수	597	0	0	597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283	369	6	658
	비율	43.0%	56.1%	0.9%	100.0%
성범죄	수	2,374	276	189	2,839
	비율	83.6%	9.7%	6.7%	100.0%
강도죄	수	1,338	1	0	1,339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390	3,020	737	4,147
	비율	9.4%	72.8%	17.8%	100.0%
위증죄	수	37	928	133	1,098
	비율	3.4%	84.5%	12.1%	100.0%
무고죄	수	22	893	254	1,169
	비율	1.9%	76.4%	21.7%	100.0%
전체	수	5,041	5,487	1,319	11,847
	비율	42.6%	46.3%	11.1%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살인죄	살인	238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살인미수	330
	존속살해	19
	존속살해미수	10
	전체	597
뇌물죄	뇌물공여	340
	뇌물수수	182
	부정처사후수뢰	11
	수뢰후부정처사	17
	제3자뇌물교부	29
	제3자뇌물수수	3
	제3자뇌물취득	23
	특가법(뇌물)	53
	전체	658
성범죄	강간	105
	강간살인	1
	강간상해	130
	강간치사	2
	강간치상	251
	강도강간	15
	강제추행	384
	강제추행상해	30
	강제추행치상	96
	미성년자의제강간	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1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3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315
	성폭법(강간등살인)	5
	성폭법(강간등상해)	91
	성폭법(강간등치상)	112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1
	성폭법(절도강간등)	25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228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63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69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7
	성폭법(특수강간)	196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62
	성폭법(특수강제추행)	21
	성폭법(특수준강간)	4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71
	준강간	33
	준강간치상	6
	준강제추행	82
	준강제추행치상	4
	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66
	특수강제추행	1
	전체	2,839
강도죄	강도	153
	강도살인	26
	강도상해	540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강도치사	4
	강도치상	49
	준강도	91
	준특수강도	10
	특가법(강도)	1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9
	특강법(특수강도)	1
	특수강도	446
	전체	1,339
횡령·배임죄	배임	367
	업무상배임	231
	업무상횡령	1,704
	특경가법(배임)	97
	특경가법(횡령)	174
	횡령	1,574
	전체	4,147
위증죄	모해위증	9
	위증	906
	위증교사	183
	전체	1,098
무고죄	무고	1,164
	특가법(무고)	5
	전체	1,169

I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6조 (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 (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0. 7. 15.자 관보 제17299호에 공개(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 제2010-1호)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수정 양형기준 책자 발간 예정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 2010. 6. 29. 양형위원회 제26차 회의
- 관보게재 의뢰 : 2010. 7. 12.(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관보게재 : 2010. 7. 15.(목)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0. 7. 하순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0. 8. 12.(목) 14:00~18:4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참석자 : 총 150여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회 위원 : 김광태(상임위원), 구옥서, 서석호, 성낙송, 이민걸, 조건호, 하태훈, 한상대
 - 전문위원 : 강영수, 김현석, 이주형, 정준화, 조은경
 -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 등

2. 발표 내용

제 목	발표자/토론자/답변자	
● 공문서 / 식품·보건 / 약취·유인 /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종합발표	강영수 수석전문위원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이승호, 이용구
	답변	김현석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박형관, 박형연
	답변	김현석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원민경, 최승재
	답변	강영수
●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답변	이주원, 정한중
	답변	정준화

IV. 의결안건 상정 요청서 접수 보고

1. 개요

- 정동민 양형위원께서 이연주, 한상대 양형위원의 동의를 받아 ‘형량범위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의결안건 상정 요청서를 운영지원단에 제출함에 따라 양형위원회에 보고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5조 (의안의 구분 및 상정)

- ② 위원은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에게 의결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을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안건 상정 일정

- 요청서 접수 : 2010. 8. 16.(월)
- 의결안건 상정
 - 상정일 : 2010. 8. 30.(월) 양형위원회 제27차 회의
 - 의안번호 : 제2010-17호
 - 의안명 : 형량범위내 기준점 설정방안 의결의 건

※ <별첨> 의결안건 상정 요청서 참조

V. 연간보고서 발간

1. 개요

- 2010. 3. 22. 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0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0-7호)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해 온 연간보고서 발간 준비를 마쳤음

2. 추진 경과

- 2009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 2010. 3. 22.
- 초안 완성 및 견본 제작 : 2010. 3. ~ 7.
- 위원 회람 : 2010. 8. 초순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0. 8. 중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 2010. 8. 하순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1,45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46배판), 양면 2도
 - 350쪽

4. 국회 보고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공문과 함께 연간보고서 배송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연간보고서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 선정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 헌법재판소
- 검찰청
- 입법부(국회도서관 포함)
- 행정부
- 유관기관(협회, 언론기관, 연구원, 공단 등)
- 민간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 언론기관
- 도서관(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 지방자치단체(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 배부표

- 구체적 배부내역은 아래 배부표와 같음

2009년도 연간보고서 배부표

배부처 \ 구 분		수 량	비 고	
법 원	1. 대 법 원	35		
	2. 법 원 행 정 처	93		
	3. 사 법 연 수 원	7		
	4. 법원공무원교육원	4		
	5. 법 원 도 서 관	21		
	7. 고등(특허)법원	31		
	8. 지 방 법 원	211		
	소 계		402	
외부 기관	국 가 기 관	8. 헌법재판소	14	
		9. 검 찰 청	191	
		10. 입 법 부	152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배송 국회 요구에 따라 수량 변동가능성 있음
		11. 행 정 부	125	
	12. 유 관 기 관·단 체		197	
	13. 언 론 기 관		64	법조출입 30개 언론사
	14. 도서관	대학도서관	112	56개 주요대학도서관 각 2부
		공공도서관	45	국립중앙도서관 5부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 20개소 각 2부
	15. 지방자치단체		32	16개 광역자치단체×2부
	소 계		932	
양형 위원 회	위원 및 전문위원		46	전직 위원 및 전문위원 포함
	운영지원단		70	보존용 및 예비용
	소 계		116	
총 계		1450		

VI. 전문위원 업무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28차	2010. 8. 23.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의 주요 토론 쟁점에 관한 논의 ○ 형량범위 내 기준점 설정방안에 관한 논의

Ⅶ. 전문위원 위촉

1. 개요

- 2010. 7. 17.자로 일부 전문위원(8명)에 대한 임기만료
 - 임기만료 전문위원 : 김용철, 김한균, 박영식, 서봉규, 이상원, 이주형, 조은경, 최석운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추진 내역

가.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성과를 토대로 추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종전 전문위원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나. 위촉 방안

(1) 연임 위촉

- 박영식, 서봉규, 이상원, 이주형, 조은경 전문위원(5명)

(2) 신규 위촉

- 강우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별첨>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기재 참조

다. 진행 경과

- 2010. 7. 16. 연임 위촉(안) 결재 보고
- 2010. 7. 16. 위원장 결재
- 2010. 8. 20. 신규 위촉(안) 결재 보고
- 2010. 8. 20. 위원장 결재

라. 전문위원 구성(안)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전문가	교수 /전문가
수석전문위원	강영수						
제1팀	김현석		서봉규	범 현	이상원	조은경	
제2팀	이주형	정준화		박영식	김혜정	강우예	

VIII.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준비

1. 필요성

- 논의 주제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전문위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통한 일체감 형성의 기회를 마련
- 전문위원 제30차 전체회의를 겸해 1박 2일로 개최

2.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0. 하순 내지 11. 초순(1박 2일)
- 장소 : 서울 인근의 적합한 장소 물색중

3. 참석대상

- 전문위원 전원
- 운영지원단장
- 기획운영과장, 서무담당관

4. 주제

- 전문위원단에서 선정한 안건 등

IX.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준비

1. 목적

-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통일성 향상
- 분석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습득
-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소속감 제고

2. 개요

- 일 시 : 2010. 10. 1.(금) ~ 10. 2.(토) (1박 2일)
- 장 소 : 대법원 가인연수관
- 참 석 : 양형자료분석관(15명), 양형자료조사과 직원(2명)
※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참관
- 주제발표 : 양형자료조사·분석 관련 주제

X.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요구

1. 개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무성, 이두아, 주성영 의원으로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요구자료가 접수됨
- 이인복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으로부터 양형기준 준수율에 대한 요구자료가 접수됨

2. 요구 내용

가. 김무성 의원 요구 내용 및 답변

- 요구 내용 :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문제점
 - 양형위원회는 사기, 절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 설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및 성폭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시행하는 등 제2기 양형기준안 설정작업과 기존 양형기준 수정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왔음
 - 또한 유기징역형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2010. 10. 16.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여부에 관한 검토도 같이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나 아직까지 학계 및 양형실무에서의 본격적 논의 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규범적 관점에서만의 검토만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대책
 -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 축적된 연구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 제2기 양형기준의 설정을 완료할 것임
 - 또한,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른 현행 양형기준의 수정방안에 관하여

는 학계 및 실무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요구 내용 : 양형기준(살인죄, 뇌물죄, 성범죄)의 집행유예에 대한
법관의 재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집행유예기준을 마련하였음
- 현행 집행유예기준에 법관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유념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유예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요구 내용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재량폭이 넓어 양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형종 및 형량범위의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 양형인자 및 범죄 특성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예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①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② 강제추행, ③ 강제유사성교, ④ 강간으로 유형 분류)하여 권고형량범위에 차등을 둔 다음, 각 유형별 형량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개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영역으로 나누어 권고형량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였음
-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형량범위의 폭이 최대 6년 9월에 이르는 등 미국 연방과 주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결코 넓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는, 양형책임에 비례하는 형은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지 폭으로 존재한다는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함

○ 요구 내용 : 아동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양형위원회는 약 9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10. 6. 29.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0. 7. 15. 관보에 게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앞으로도 기존 양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양형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음

나. 이두아 의원 요구 내용 및 답변

○ 요구 내용 :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김무성 의원 답변 내용과 동일

다. 주성영 의원 요구 내용 및 답변

○ 요구 내용 : 성범죄에 대한 양형에서 최근 3년간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 시행 전후의 평균 형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평균형량이 그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형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실무 통계보다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한 양형기준이 양형 실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라. 박민식 의원 요구 내용 및 답변

○ 요구 내용 :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양형기준에 의한 1심 판결 중 지방법원별, 죄명별 통계별 양형준수율 자료

- 죄명별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명

범죄군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하한준수포함)	부준수	
살인죄	수	494	56	550
	비율	89.82	10.18	100
뇌물죄	수	300	82	382
	비율	78.53	21.47	100
성범죄	수	1,790	227	2,017
	비율	88.75	11.25	100
강도죄	수	921	113	1034
	비율	89.07	10.93	100
횡령·배임죄	수	2,595	129	2,724
	비율	95.26	4.74	100
위증죄	수	500	67	567
	비율	88.18	11.82	100
무고죄	수	541	32	573
	비율	94.42	5.58	100
전체	수	7,141	706	7,847

단위: 명

범죄군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하한준수포함)	부준수	
	비율	91.0	9.0	100

•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명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체
		준수(하한준수포함)	부준수	
A	수	532	47	579
	비율	91.88	8.12	100
B	수	246	36	282
	비율	87.23	12.77	100
C	수	277	27	304
	비율	91.12	8.88	100
D	수	232	30	262
	비율	88.55	11.45	100
E	수	227	22	249
	비율	91.16	8.84	100
F	수	414	40	454
	비율	91.19	8.81	100
G	수	541	78	619
	비율	87.40	12.60	100
H	수	1008	110	1118
	비율	90.16	9.84	100
I	수	223	20	243
	비율	91.77	8.23	100
J	수	468	64	532
	비율	87.97	12.03	100

단위: 명

지 방법 원		양형기준 준수여부		전 체
		준수(하한준수포함)	부준수	
K	수	248	25	273
	비율	90.84	9.16	100
L	수	705	46	751
	비율	93.87	6.13	100
M	수	511	40	551
	비율	92.74	7.26	100
N	수	234	7	241
	비율	97.10	2.90	100
O	수	402	32	434
	비율	92.63	7.37	100
P	수	519	64	583
	비율	89.02	10.98	100
Q	수	228	16	244
	비율	93.44	6.56	100
R	수	126	2	128
	비율	98.44	1.56	100
전 체	수	7141	706	7847
	비율	91.00	9.00	100

XI.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0. 6.28.	○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요청
2	2010. 7.11.	○ 2010. 7. 11.자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실린 판결과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 ○ 신문기사 내용 요약 : 십대 소년 두 명이, 십대 초반의 여아들을 찢질방, 놀이터, 화장실, 피해자의 집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을 한 사건으로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해 여아들의 선처요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가해자인 십대 소년 두 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음.

XII. 기타

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 내용

- 별첨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과 같음